

# 주간 통일정세

2016-08

## Contents

### I.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안보
2. 대내 정치
3. 경제
4.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일본 자위대, 미군 다음가는 침략무력”(2/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전범국의 평화 타령’이란 글에서 “자위의 미명 하에 얼마 안 되는 무력으로 창설된 자위대가 오늘 서방세계에서 미군 다음가는 침략 무력으로 변모된 것은 전적으로 군국화를 국가 정책으로 정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온 데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어 “지난해 ‘일미 방위 협력 지침’과 ‘안전보장 관련법’ 개정으로 해외 진출의 합법적 공간을 마련한 일본은 지금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일본 자위대의 지난달 제9항공단 창설 등을 거론하며 “섬나라인 일본은 지상무력보다도 해상과 공중무력 강화에 발광하고 있다”고 강조함.
  - 신문은 또한 일본이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감행한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과 중국본토 침략, 태평양전쟁 등 해외 침략 전쟁들을 거론하며 “일본이야말로 평화의 간판을 도용해온 전쟁국가, 침략의 온상”이라고 목청을 높임.
- 북매체, 한미훈련 앞두고 “위성탄 날리겠다” 협박성 비난(2/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미국이 없는 지구를 만들자’ 등의 개인필명 기사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의 이른바 ‘참수작전’을 거론하며 “감히 우리의 삶의 전부인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것은 분명 선전포고”라며 “이 한 몸이 미사일이 되어 위성탄을 하늘로 날려 보내겠다”고 위협함.
  - 이어 “미제의 이 무모한 망동은 멸망을 앞둔 자의 최후 발악”이라며 “미국이 주구의 처절한 종말을 눈앞에 보면서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 기지들과 미 본토가 잿가루로 변할 것”이라고 협박함.

- 특히 과거 한국전쟁,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 등과 관련된 사진을 실어 “미국의 도발에 의한 참여한 조미 군사적 대결전들은 매번 우리의 빛나는 승리로, 미국의 항복과 사죄로 결속(마무리)되었다”며 과거 북한과 미국의 대결에서 항상 승리했음을 선전하기도 함.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WSJ “미국, 북한 핵실험 직전 북한과 평화협정 논의 합의”(2/22, 월스트리트저널)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기사에서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수일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북한과 은밀히 합의했다고 보도함.
  -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만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 같은 전제조건을 포기하고 논의에 합의했다고 WSJ는 설명함.
  - 미국 정부는 그 대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곧이어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전함.
- 北매체 “美 원하는 어떤 전쟁도 다 상대” 주장(2/23, 조선의오늘)
  - 조선의 오늘은 23일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미제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 수 있다”고 위협함.
  - 매체는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북한군 훈련 참관 소식을 전하며 “적대 세력들이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무분별하게 날뛰고 있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작전을 비롯해 적들을 일격에 격파할 수 있게 준비됐다”고 주장함.
  - 이어 “세월의 모진 강풍 속에서 역세여진 우리의 총대는 영원히 조선 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수호의 힘, 선군 조선의 최후 승리의 보검으로 위용 떨칠 것”이라고 말함.

■ 북한 “미국 서방이 최악의 인권 불모지”(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23일 발표한 고발장에서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인권 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더욱더 우심하게 (심하게) 감행하고 있다”며 미국과 서방이 최악의 인권 불모지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협회는 각종 총기 난사, 테러 사건과 난민 사태 등을 미국과 서방의 책임으로 돌리며 “미국과 서방은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떠들지 말아야 하며 제 집안 문제나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한, 日경찰 조선총련 산하단체 압수수색에 반발(2/22, 조선중앙통신)

- 일본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산하 경제단체를 압수수색한데 대해 북한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함.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존엄 높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인 (조선)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 탄압과 반인륜적인 인권유린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일본 경찰청의 파쇼적 폭거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조선총련 중앙본부는 긴급대책협의회를 소집해 압수수색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며, 일본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도 개최했다고 통신은 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안보리, 초강력 北제재…모든 화물검색·항공유·광물거래 금지(2/26,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함.
  -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등이 담겨 별다른 수정 없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초강경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고 뉴스는 전함.
  - 이는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것으로 김정은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덧붙임.

##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北, 2월 22일 우주비행사 구조와 귀환 및 우주물체 반환에 관한 협정과 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에 관한 협약 가입(2.23,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행위를 우심하게 감행하고 있다’며 ‘최악의 인권 불모지, 최대의 인권 유린국인 미국과 서방은 제 집안문제나 바로 잡는데 집중하라’고 주장(2.23, 중앙통신)
- 日 시마네현에서 해마다 ‘다케시마(독도)의 날’(2.22) 행사를 진행하는 것 관련 “비열한 광대극”이라고 규탄하고 ‘그따위 황당한 광대극을 벌인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로 바뀔 수는 없다’고 주장(2.23,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 2월 23일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선포 46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2.23, 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 2월 23일 ‘조국수호의 날’ 즈음 해방탑에 헌화(2.2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中 친선 봄맞이 음악회(주북 中 대사관 주최), 2월 24일 박춘남(문화상) 등을 초대한 가운데 주북 中 대사관에서 진행(2.24, 중앙통신)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축하단 성원들, 2월 20일 김정일 생일(2.16)에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편지 전달(2.24,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월 25일 쿠웨이트 추장(사바흐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흐)에게 ‘쿠웨이트 독립 55주년과 해방 25주년’ 축전(2.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2월 24일 신임 코트디부아르 외무상(아브달라흐 알베르 뚜아케 쓰 마브리)에게 축전(2.25, 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 관련 주북 시리아 대사(탐맘 술레이만), 2월 25일 김기남(당 비

- 서·리룡남(대외경제상) 등 초대한 가운데 연회 개최(2.25, 중앙통신)
- 재캐나다 조선인연합회 대표단과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사무총장, 2월 25일 각각 평양 출발(2.25, 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팔레스티나 대사, 2월 26일 김정일 생일 즈음 ‘양형섭’ 등을 초대하여 연회 마련(2.26, 중앙통신·중앙방송)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상무위 의장, 1월 19일 외교관계 설정 20돌 즈음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낸 소식 뒤늦게 보도(2.26, 중앙통신)
- 2016년 민족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민족교육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합동회의, 2월 23일 도쿄 조선회관에서 진행(2.26, 중앙통신)
- 韓美 연합훈련 ‘작전계획 5015와 참수작전’은 ‘증오와 분노를 핵폭발처럼 터뜨리게 하는 용납 못할 특대형 최악’이라고 미국을 비난하며 ‘일단 명령이 내리면 그 증오와 분노는 청와대와 백악관을 비롯한 악의 소굴들을 잿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위협(2.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 경찰의 재일동포 체포(北에 생활잡화 불법수출 혐의) 관련 ‘총련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정치적 도발’이라며 ‘일본 반동들은 反총련 책동이 가져올 엄청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2.27, 중앙통신·노동신문)
- 강화도조약 체결(1876.2.27) 140주년을 맞아 ‘강화도조약을 토대로 일본은 조선 봉건왕조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의 경제를 파탄시켰다’며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과거 범죄를 총결산하고 모든 최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2.27, 중앙통신)
-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 총비서, 2월 15일 김정은 축전(인민혁명당 중앙위 총비서 당선 관련)에 대한 답전(2.27, 중앙통신)
- 미국의 ‘우리(北)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은 “우리(北)에 대한 선전포고, 전쟁행위로 그가 누구든 가차없이 징벌할 것”이라며 ‘무자비한 반미성전 전개’ 강조(2.28, 중앙통신·노동신문)

## 2.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인민군 군악단 70돌 기념 연주회 관람(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군악단 창립 70돌 기념 연주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연주회가 끝난 뒤 만족을 나타내면서 “70년간 인민군 군악단은 우리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과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자랑스러운 행보를 걸어왔다”고 말함.
- 그는 “군악단을 혁명대오의 맨 앞장에 세우고 군악소리를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리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것은 당중앙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덧붙임.

- **北김정은 “軍 중대성명 발표 이틀만에 150여만 명 입대 지원”(2/28, 조선중앙통신)**
  - 김 제1위원장은 일꾼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에게 지난 27일 보낸 감사문에서 “(중대성명 발표 후) 이틀 동안에 전국적으로 150여만명에 달하는 일꾼들과 근로청년들, 대학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인민군대에 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단원하였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감사문에서 “우리의 일꾼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은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하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모임을 열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멸적의 의지를 토로하였다”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그는 또 “적들은 우리 인민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다”며 “우리 당은 적대세력의 온갖 도발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해 버리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올 것”이라고 주장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대북 소식통 “北 2인자 황병서, 신병 치료받는 듯”(2/25, 연합뉴스)**
  - 최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북한 권력서열 2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신병 치료를 받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황병서는 북한 내에서 신병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황병서는 원래 척추가 안 좋다”며 “북한 간부들은 행사 때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함.
- **‘건강이상설’ 황병서 견재 과시…11일 만에 공개활동(2/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대전차유도무기 시험사격 현지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등장하는 5장을 포함한 사진 19장을 공개함.

- 사진에서 황병서는 고개를 숙여 쌍안경을 들여다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왼편 또는 뒤쪽에 부동자세로 서 있거나 박수를 치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황병서는 서 있는 자세와 얼굴 표정 등으로 미뤄 업무수행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北 리수용 외무상,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차 출국(2/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31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27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짧게 보도함.
  - 리 외무상은 전체회의에서 지난 15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함.

#### 다. 공식 행사

- **北, 9월 24~26일 원산서 국제친선항공축전 개최(2/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리상렬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 개발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발언을 인용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6'이 열리게 된다”고 밝힘.
  - 이어 행사는 비행기 탑승 관광, 열기구 띄우기, 낙하산 타기, 예술공연, 태권도 시범, 농악무 등의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고 통신은 소개함.
  - 통신은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항공 체육애호가들과 관광객들이 축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 의향을 밝히고 있다”고 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최무선 장군 띄우기...‘핵·미사일 도발’ 정당화 포석(2/23,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2일 오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옛말 할아버지, 조선 역사인물 이야기-화약을 만든 최무선1'을 방영하면서, 고려말 화약을 제조



해 왜구 격퇴에 큰 공을 세운 최무선 장군 띄우기에 나섬.

- 이 프로그램에서 옛말(옛날 이야기)의 할아버지로 나오는 배우는 왜구의 노략질로 무고한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에 최무선 장군이 크게 분노했다고 어린이들에게 설명함.
- 이어 최무선 장군이 “나라가 힘이 약하면 망국이다. 힘을 키워서 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화약과 화약 무기를 만들어서 악한 왜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기고야 말 테다”라며 화약과 화기(火器)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함.

■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계기로 ‘위성속도’ 내걸다(2/24, 연합뉴스: 2/23, 노동신문: 12/3,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가 북한 주요매체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시점을 전후해 자취를 감췄던 ‘위성속도’ 표현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북한 매체들이 제4차 핵실험(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2월 7일)를 계기로 ‘위성속도’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워 대중동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24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23일 '백두산영웅청년3호 발전소' 공사 소식을 전하며 '만리창공으로 솟구치는 위성속도로 더 높이, 더 빨리'라는 제목을 붙임.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3일 기사에서 “대지를 박차고 오르는 위성속도로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며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지는 김정은 시대의 자랑찬 모습을 빛내어나가자”며 ‘위성속도’에 대해 언급함.

■ **북한, 5월 당대회 앞두고 속도전 ‘70일 전투’ 독려(2/24,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의 편지를 전체 당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평양에서 열렸으며, 북한이 오는 5월 초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전체 당원들을 대상으로 속도전 사업방식인 ‘70일 전투’를 독려하고 나섰다 24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들, 도당 책임비서 등이 참석함.
- 중앙위는 편지를 통해 전체 당원들에게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전개할 것으로 호소했으며, 회의에 이어 ‘70일 전투’를 벌이기 위한 지휘부 조직 안도 발표됐음.

- 노동신문도 24일에 “70일 전투에 산악 같이 떨쳐나선 천만심장에 맥동치는 신념,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고 선동하는 글을 실었음.

- 제20차 김정일화축전 폐막식, 2월 22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김기남(당 비서)·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용진(내각 부총리)·김창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장 폐막사) 등 참가한 가운데 시상 등 진행(2.22, 중앙방송·중앙통신)
- ‘자강력은 강국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며 자강의 길에 혁명의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라며 ‘김정은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 높이 역세게 싸워나가자’고 주장(2.2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2016 조종친선 봄맞이음악회, 2월 23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2.23, 중앙통신)
- 제31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식, 2월 23일 진행(2.23, 중앙통신)
- ‘당 중앙위·당 중앙군사위 공동구호 과업 관철 및 70일전투’ 관련 평양시 군중대회, 2월 25일 김일성광장에서 김수길(평양시당 책임비서) 보고 및 「결의문(만단의 전투동원대세 등)」 낭독 등 진행(2.25, 중앙방송·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 현지 요해 및 김일성경기장 개·보수 공사장과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방문(2.2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저작 발표 2주년 관련 ‘지난 2년간 천만군민이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발걸음도 같이 해나가는 혼연일체로 결속되고 수령들의 유훈과 당정책이 현실로 꽃피어나고 있다’고 선전(2.25,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에 관한 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기 위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연구토론회, 2월 25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 및 주영길(‘직총’ 위원장) 등 토론(2.25, 중앙방송·중앙통신)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금성트랙터공장 ·대안천선유리공장 사이의 ‘2015년 사회주의 증산경쟁 총화모임’, 2월 24일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임철웅(내각 부총리)·주영길(‘직총’ 위원장 보고)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2.25, 중앙방송)
- 3중모범청년작업반·청년분조 칭호 수여(박천군 석계협동농장 청년작업반 등 19개 단위) 모임, 2월 2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2.25, 중앙방송)
- 국가우표발행국, 새 우표들(개별우표 4종,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조선인민의 투쟁모습 반영)과 개별우표(1종, 산림복구 전투에 호소하는 근로자 모습 형상) 및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반영 새 우표 발행(2.25,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반탱크 유도무기 시험 사격 현지지도(2.27, 중앙통신)
-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70일 전투에 부른 당의 호소에 심

- 장의 피를 끓이며 하루하루를 당과 혁명, 조국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금지 높게 빛내어나가자'고 호소(2.26,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청년전위·여맹원들의 꺾기모임, 2월 26일 청년공원야외극장과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종종 진행(2.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31차 평양건축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2.24~26 진행(2.26, 중앙통신)
  - 남호두회의 80돌 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2월 26일 리혜정(사회과학원장)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과학원에서 진행(2.26, 중앙통신)
  - 2015년 수산부문 사회주의 증산경쟁 총화모임, 2월 24일과 26일 서해지구와 동해지구로 나눠 문덕수산사업소와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에서 진행(2.27,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2월 28일故 정기종(4·15문학창작단 작가) 빈소에 조화 전달(2.29, 중앙통신·중앙방송)
  - '당 중앙위·당 중앙군사위 공동구호 과업 관철 및 70일전투' 관련 노동계급·직원들·농근맹원들·농업근로자들 꺾기모임, 2월 28일 남포시 대안구역과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각각 진행(2.28, 중앙통신·중앙방송)

### 3. 경제

#### 가. 정책 동향

- “北, 백두산 인근 무봉국제관광특구 개발 박차”(2/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백두산 인근의 무봉국제관광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북한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 지난해 10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 당국이 특구 내 건물과 도로를 보수하고 전력공급망을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에 나섰다”고 밝힘.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방송에 “특구 인근 삼지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 나. 주요 조치

- “北, 외화벌이 해외파견 근로자 늘리려 모집요건 완화”(2/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최근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파견 근로자를 늘리려고 모집 요건을 완화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 당국이 더 많은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당 비당원과 미혼자를 제외하던 모집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지원자들이 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해외 파견 근로자 모집은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며, 의료와 건설업, 제조업, 농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들이 모집 대상에 속한다”며 “해외 근로자들의 수입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면서 지원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라고 전함.

#### 다. 경제 상황

- **북한에도 자동차 늘자 주유소 판촉전…“미녀 모시기 경쟁”(2/22,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에서 자동차의 증가로 주유소들이 늘어나면서 판매 경쟁이 펼쳐지고, 주유소 종업원이 여성의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방송에 “청진시의 매 구역들에는 10개 이상의 연유 판매소(주유소)가 자체 투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 많은 고객의 유치를 위해) 너도나도 외모가 고운 여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이 심하다”고 밝힘.
  - 이어 “특히 새로 문을 연 연유 판매소들에서는 손님을 끌려고 미모의 여성들을 채용하는데, 인물에 따라 한 달 월급으로 중국 위안화 250위안(4만7천원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 **북한 “김일성대, 도청방지 최첨단기술 개발” 주장(2/25, 통일신보)**
  - 북한이 도청을 막을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인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통일신보가 25일 보도함.
  - 매체는 자력으로 첨단량자(양자) 암호통신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몇 개 나라들만이 독점하는 첨단기술인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해 내는 데 성공했다”면서 “통신에서 도청의 흔적을 탐지할 뿐 아니라 원리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게 하는 첨단암호통신 기술”이라고 소개함.

- 또한 매체는 “미국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청 행위는 세계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런 도청 행위는 기업 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나라 수반의 개인 전화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 **대북제재 국면서 북한 IT인력 수천명, 중국서 외화벌이(2/22, 연합뉴스)**
  -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 와중에 예년보다 많은 수천명의 북한 IT 전문인력이 중국 동북부 지역에 송출돼 대대적인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22일 중국 접경지역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IT 관련 인력 수천명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긴장 국면에서 중국으로 넘어와 중국 현지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들 인력은 북한의 고려컴퓨터회사(KCC), 평양정보회사(PIC) 등 IT 전문업체 출신이 대부분으로 일부는 김일성종합대, 김책공대 등 북한 대학의 관련 학과 출신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대(對) 러시아 수입액 2년 연속 감소(2/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대(對) 러시아 수입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이 방송이 인용한 코트라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013년 1억 342만 달러에서 2014년 8천215만 달러로 20.6%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7천834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4.6% 줄었음.
  - 이는 북한이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무역 확대에 애쓰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함.
- **1월 북중교역, 제4차 핵실험 영향 거의 안받았다(2/25, 연합뉴스)**
  -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지난달 중국과 북한 간의 정상교역 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25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이 입수한 중국해관총서의 ‘북중 1월 교역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북중 교역액은 총 3억 8천8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 3억 9천300만 달러에 비해 1.2% 줄었다고 뉴스는 전함.

-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건설 물길공사에 동원된 일꾼들의 최근 ‘4,000여㎡ 토량처리 및 1,000여㎡ 암석 굴착 등 물길공사 진척’ 선전(2.22, 중앙방송·노동신문)
- 백두산영웅 청년돌격대 함경북도 여단 돌격대원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발전기실 하부구조 벽체타입 완료(2.23, 중앙통신)
- 석탄공업부문, 석탄 증산투쟁에 주력(2.24, 중앙방송)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유전의학연구소,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알부민융합 단백질인 알부트로핀과 알부트린” 개발(2.25, 중앙통신)
-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함경남도·황해북도 여단 전투원들의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언제콘크리트 속벽타입 60% 계선 및 본체 쌓기 40%계선 본격 추진(2.25, 중앙방송)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김성준, 산림조성을 위한 토대축성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주장(2.26, 중앙통신)
- 육·해운부문 노동계급, 지표별 계획 107% 초과 달성(2.27, 중앙통신)
- 함주돼지공장에서 집짐승의 소화흡수율을 높이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새끼돼지 생산율 1.7배, 육성을 1.4배 증가’ 등 각지 축산기지들의 ‘고기·알 증산 사업’ 전개(2.28, 중앙통신)

## 4.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당대회 앞두고 ‘폭발물 제조금지’…“테러차단 목적”(2/2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북한이 테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주민들에게 불법적인 폭발물 소지 및 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경고문을 회람시키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북한의 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인민반장들이 직접 매 가정을 방문해 특별경고문을 열람시키고 서명을 받고 있다”며 “이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혹시 있을지 모를 내부 적대분자들의 파괴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함.
  - 방송은 북한 당국이 무선조종 완구류의 수입과 유통도 금지했다고 덧붙임.

## 나. 시장 관련

### ■ “유엔지원 의약품, 北 장마당서 고가 판매”(2/25,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등이 지원한 의약품들이 북한의 장마당에서 고가에 팔리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국계 미국인 결핵균 전문가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이나 외부에서 들어가는 약이 북한에서 장마당으로 빠져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밝힘.
- 이 전문가는 얼마전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의 결핵 병원과 요양소를 방문했고 밝힌 뒤 “병원마다 유엔에서 지원한 약이 나오는데, 양이 한정돼 많지 않다”면서 “북한은 무상의료라고 말하는데 말뿐이지 의사들이 병원에 나온 약을 빼들려 시장에서 판다”고 말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 김정일 前 경호원 “김정은 초호화 생활…ICC 회부해야”(2/24, 미국의소리)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경호원 출신 탈북자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데도 김정은 제1위원장은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 탈북자 이영국씨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인권회의인 ‘제8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김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방송이 전함.
- 이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국에 대규모 초호화 별장 14개를 건설했고,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이들 별장에서 수영과 사냥 등을 즐기고 있다”고 증언했으며, “지도자로서 주민들을 돌봐야 하는 김 제1위원장은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으며, 전국에 정치범 수용소를 건설해 주민들이 기아와 영양실조, 구타 등으로 숨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북한 정월대보름 ‘공휴일’…“곳곳서 민속놀이”(2/22, 조선의오늘)
  - 조선의 오늘은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각지에서 전통풍습이 펼쳐지고 있다고 소개함.
  - 매체는 “수도 평양과 지방의 거리와 마을들, 공원, 유원지를 비롯한 곳곳에서는 학생소년들과 민족옷차림의 귀여운 어린이들이 연띄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줄넘기 등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흥성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함.
  - 또한 “민족요리 전문식당들과 각지 급양봉사망들에서는 전통적인 민족음식들로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고 매체는 밝힘.

©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러 우주당국 "북 발사 '광명성4호' 지구관측 활동하는듯"(2/23, 연합뉴스)
  - 러시아 미사일우주군 소속의 '우주상황정찰총괄센터' 소장 안드레이 칼류타 대령은 22일(현지시간) 자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센터에서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린) 로켓 3단과 위성 자체 등 2가지 물체에 대한 관측을 해왔다"며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위성(광명성 4호)이 원격 지구 관측용이며 관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힘.
  - 러시아 당국의 발표는 광명성4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발표와 어긋나는 것으로, 이런 발표는 광명성호 로켓 발사가 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것이란 북한 측의 주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기도 함.
- 힐 전 미차관보 "한국, 미지의 영역 직면...국제사회 지지 필요"(2/24, 연합뉴스)
  -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한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표현함.
  - 힐 전 차관보는 한 국회의원이 "한국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소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한반도의 전략적 선택을 극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한국은 호전적인 이웃에 맞서 방어 태세를 취할 것"이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등이 검토되는 점을 언급함.
  - 이어서 힐 전 차관보는 북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고, 한국인들이 그들의 전략적 상황을 숙고하는 동안 국제사회는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임.
- 미태평양사령관 "북한, 미사일 또 발사할 가능성 있다"(2/24, 연합뉴스)
  -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능력을 향상시킨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일본이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함.

■ <안보리 제재> 中외교부 "북한 민생에 영향줘선 안돼"(2/26,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결의안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관련 결의가 마땅히 조선의 핵미사일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여긴다"며 "조선(북한)의 정상적인 민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
- 이런 답변은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담긴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항공유 공급 금지 조치, 광물거래 제한 조치 등이 '전면적 제재'가 아닌 '선택적·부분적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홍 대변인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조속한 6자회담 재개'도 강조함.

■ 美국가정보국장 "北 핵실험…수폭 실험 결과와 안맞아"(2/26, 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5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지난달 감행한 핵도발은 북측이 주장하는 '수소탄'이 아닌 핵실험이라고 판단했음.
-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의 클래퍼 국장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의 가동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계속해서 미국의 이해와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과 관련해 "북한이 비록 그 무기체계(KN-08)의 비행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 무기체계를 배치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시작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음.

나. 미·북 관계

■ [단독] "미·북, 작년말 '평화협정 논의' 비공식 의사교환"(2/22, 연합뉴스)

-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작년 말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공식 제안한 이후 미국과 북한이 비공식 외교채널을 이용해 양측의 의사

를 교환한 사실이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제안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고 평화협정 논의는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고 논의는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고 말함.
- 미국과 북한은 직접 면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 비공식 외교경로인 '뉴욕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자 온라인 판에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며칠 전에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은밀히 합의했다고 보도함.
-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비핵화 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 논의에 합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 ■ 北매체 “美 원하는 어떤 전쟁도 다 상대” 주장(2/23, 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23일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미제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 수 있다"고 위협함.
- 조선의 오늘은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북한군 훈련 참관 소식을 전하며 "적대 세력들이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무분별하게 날뛰고 있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작전을 비롯해 적들을 일격에 격파할 수 있게 준비됐다"고 주장함.

#### ■ 美고위당국자 “비핵화에 강조점 없는 대화는 없다”(2/23,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비핵화에 강조점을 두지 않은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힘.
-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에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쪽으로 입장 변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임.
-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형태로 평화협정 논의를 미국 측에 요구해왔으며 중국은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현시점에서 대북정책 기조의 무게중심을 압박에

두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함.

■ **北매체, 한미훈련 앞두고 "서울 워싱턴 불바다 만들것" 협박(2/25,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미국이 없는 지구를 만들자'는 개인필명 기사를 통해 "감히 우리의 삶의 전부인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것은 분명 선전포고"라며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자"라고 선동함.
- 노동신문은 이어 "악의 총본산인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 버릴 절호의 기회가 왔다"면서 "이 한 몸이 미사일이 되어 워싱턴을 하늘로 날려 보내겠다"고 위협함.
- 또한 '승리는 조선의 것이다'는 기사에서 "미제의 이 무모한 망동은 멸망을 앞둔 자의 최후 발악"이라며 "미국이 주구의 처절한 종말을 눈앞에 보면서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 기지들과 미 본토가 잿가루로 변할 것"이라고 협박했음.

■ **美, 안보리 결의 앞두고 北 타격능력 갖춘 ICBM 또 발사(2/27, 연합뉴스)**

- 미국 공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25일(이하 현지시간) 밤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함.
- 이는 20일에 이은 두 번째 발사실험으로, 북한을 비롯한 역내 경쟁국들을 상대로 핵무장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미니트맨3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국의 유일한 핵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8천 마일(약 1만2천875km) 이상이어서 미국 서부에서 북한까지 날아갈 수 있음.

■ **북한, 미국 겨냥 "전쟁 승패 요인은 무기 아닌 정신력"(2/28, 연합뉴스)**

- 28일 노동신문은 이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무기만능론, 핵만능론이 골통에 깊숙이 박힌 악의 제국인 미국만이 고안해낼수 있는 착상"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을 겨냥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력, 사상의식"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지난 항일혁명투쟁시기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해방과 조국수호의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것은 우리의 항일혁명투사들,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이 일미 제국주의자들이 도저히 따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높은 정신력, 투철한 사상의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함.

- 또한 "우리 공화국은 핵강국"이라면서 "우리의 강위력한 핵타격 수단들은 침략의 아성들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며 미국을 위협함.

#### 다. 중·북 관계

##### ■ <안보리 제재> 中 관영언론 "가장 가혹한 처방...北 대가 치러야"(2/26, 연합뉴스)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6일 사설에서 "북한은 새로운 대가를 치러야 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평양은 자기 고집대로 핵실험을 한 데 대한 새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에 제재를 받았을 때보다 북한이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힘.
- 이어 "평양은 중국이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섰다고 중국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 "북한은 중국의 친구로서 북중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다수 중국인의 기본 태도지만 북한은 핵 문제에서는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며 "중국은 북중 우호관계를 반드시 수호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호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음.

##### ■ <안보리 제재> 中, 독자제재 시동...단둥이외 추가 입항금지 가능성(2/26, 연합뉴스)

- 26일 북·중 접경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에 적극 참여키로 한 것 외에도 이미 북한에 대해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먼저 중국은 북한의 잇단 핵실험에 자극받아 북한에 대한 무역·금융제재 조치에 합류, 자국 은행들이 대북 금융제재에 앞장서도록 했으며, 대북교역 거점인 단둥항에서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시켰고 양국 무역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석탄 무역을 중단키로 했음.
-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석탄 외에 광물 교역 제재도 포함된 만큼 조만간 다른 광물에 대한 교역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며, 중국이 이 같이

독자 제재의 강도를 높인 것은 자국 접경지역에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더 이상 용납치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읽힘.

- <안보리 제재> 북중관계 해빙 '끝'...2013년 수준으로 다시 '경색'(2/26, 연합뉴스)
  - 수년째 냉각됐다가 다소 해빙 조짐이던 북중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더해지면서 상당기간 경색될 전망이다.
  - 최근의 상황은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공식 출범한 2013년과 유사점이 많은데,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12월 친중파인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음.
  - 2013년 이후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경색된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이 안보리 제재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숙원인 평화협정 논의의 '전도사'를 자처한데다 최근 정세에도 북중이 대사관을 통한 친선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볼 때 북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옴.

## 라. 일·북 관계

- 북한, 日경찰 조선총련 산하단체 압수수색에 반발(2/22, 연합뉴스)
  - 일본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산하 경제단체를 압수수색한데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존엄 높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인 (조선)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 탄압과 반인륜적인 인권유린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일본 경찰청의 파쇼적 폭거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앞서 일본 경찰은 대북제재로 수출입이 금지된 북한에 초콜릿 등을 수출한 일본 내 한국계 수출업자 김모씨를 체포하면서 김씨와 연관성을 캐기 위해 조선총련 산하 경제단체인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음.
- 북한 "일본 자위대, 미군 다음가는 침략무력"(2/22,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국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제9조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데 대해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22일 "일본

자위대가 미군 다음가는 침략 무력"이라며 비판함.

- 노동신문은 이어 "지난해 '일미 방위 협력 지침'과 '안전보장 관련법' 개정으로 해외 진출의 합법적 공간을 마련한 일본은 지금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일본 자위대의 지난달 제9항공단 창설 등을 거론하며 "섬나라인 일본은 지상무력보다도 해상과 공중무력 강화에 발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역대로 일본 반동들이 외위대는 평화 타령은 뒤집어놓은 전쟁 타령"이라며 "평화를 부르짖으며 침략과 전쟁에 광분하였던 일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변천된 시대를 외면한 채 패망의 양갓음 속에 재침으로 질주하는 군국주의 일본에 차례 질(돌아갈) 것은 파멸밖에 없다"고 경고함.

■ **올림픽 예선 참가 북한 여자축구팀 日입국…“대북제재 예외”(2/25,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북한 여자 축구팀이 25일 오후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올림픽 예선 참가를 위해 간사이(關西)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전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라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올림픽 경기 참가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로 입국을 허용함.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선총련) 오사카본부 강현 통일부장은 "북한과 일본이 결승에 올라 나란히 올림픽에 나가면 좋겠다"며 "지금은 북일관계가 나쁘지만 스포츠를 통해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함.

■ **〈안보리 제재〉 日, 조선학교 학생에 보조금…“정세에 좌우 안된다”(2/26, 연합뉴스)**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은 관내에 있는 조선학교 5곳에 다니는 학생의 학비 보조금으로 쓰도록 5천300만 엔(약 5억8천83만원)을 예산안에 최근 반영했다고 밝힘.
- 이에 관해 가나가와 현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었지만, 국제 정세에 좌우되지 않고 현(縣)에 사는 외국 국적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함.
- 지방자치단체가 재일 조선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일본 내에 엇갈린 시각이 있음. 이 관계자는 조선학교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국제 정세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함.

## 마. 러·북 관계

- [단독]러시아 “나진-하산 프로젝트 안보리 대북 결의 따라 결정”(2/25, 연합뉴스)
  - 러시아 철도공사(RZD)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근거한 자국 정부 권고에 따라 남북러 3각 협력사업으로 추진돼온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지속 추진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경우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 철도공사와 한국 컨소시엄 간에 지분 매입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었으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강경 제재를 취하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사업 참여도 불투명해짐.

## 바. 기타

- [단독]“안보리, 北 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우주개발국 제재”(2/25,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짐.
  - 2009년 2월 신설된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배후로 지목되며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과 중국은 24일 중 대북 제재의 내용과 수위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안보리는 조만간 결의안 초안을 15개 이사국들에게 회람시킬 것으로 보임.
- “소니 해킹, 2013년 한국 방송국·금융기관 공격과 동일범 소행”(2/25, 연합뉴스)
  - 아사히(朝日)신문은 미국 정보보안업체 3개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 영화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과 한국 주요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분석을 내놓음.
  - 보도에 따르면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사용된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암호를



푸는 35개 문자로 된 비밀번호가 같았고 바이러스가 외부와 통신할 때의 메시지  
에서 동일한 철자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것임.

- 교도통신은 이들이 일본, 대만 등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으며,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음.

■ <안보리 제재> 러시아 "결의안 다음주에 표결가능...내용 분석 필요"(2/26, 연합뉴스)

- 포트리 일리이체프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25일(뉴욕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람된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다음 주에나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일리이체프는 또 러시아가 결의안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이 기존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데 대해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만 러시아의 판단에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작성된 제재 결의안이 과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 <안보리 제재> 오준 주유엔대사 "기존 제재보다 2배 이상 강도"(2/26, 연합뉴스)

-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항공유 공급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정말 강력한 수준"이라며 "기존 대북 제재보다 2배 이상 강도라고 본다"고 언급함.
-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직접 제재를 넘어, 간접 제재로 확장된 것에 의미를 두었으며, 관심을 모았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제재)'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양자 제재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유엔 제재에서는 적용된 적이 없다"고 말함.
- 오 대사는 결의안 표결 시점은 러시아의 입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면서 이르면 27일, 늦어진다면 주말을 넘겨 29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함.

■ <안보리 제재> 일본 "우리 주장 꽤 반영됐다" 평가(2/2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된 북한 제재 결의안에 자국의 요구가 비교적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결의안에 관해 "일본의 주장이 상당한 정도로 담겨 있다"고 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강한 내용의 결의가 채택되도록 공헌하고 싶다"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음.

- 일본은 북한 제재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중국이 동의한 것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주 유엔 일본대사는 결의안이 높은 수준의 대응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북한의 이웃 국가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했다"고 언급함.

■ <안보리 제재> 일본 호주 인도, 차관 협의서 대북공조 확인(2/26,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한 가운데 일본, 호주, 인도는 26일 외교 당국자 회의를 열어 북한 문제 공조를 모색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들 3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외교 차관 협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도록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음.
- 또한 이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중국의 움직임에 관해 '강한 우려'를 느낀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회담에 참가한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국제사회가 일치해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규칙 만들기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안보리 제재> NYT "대북 제재안 작동할까 의문 제기돼"(2/27, 연합뉴스)

-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제사회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끌어낼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NY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전날 발표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안 초안의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제재안에는 강력한 수위에도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지 못하는 일부 허점이 있다고 분석함.
- NYT는 효율적 제재안이 나오지 못한 분야로 북한과 중국의 접경 무역과 대중 의류수출을 언급했으며, 제재안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국외과건 노동자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줄어드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제한한 점도 지적함.

■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 왜 늦어지나...러 '몽니' 부리나(2/28, 연합뉴스)

- 당초 27일(현지시간) 중으로 결의안 채택을 위해 소집될 것으로 예상됐던 안보리 전체회의가 내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물살을 타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처리가 막판에 주춤거리고 있음.
- 막판에 발목을 잡는 변수는 러시아의 모호한 태도로 알려졌는데, 러시아가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초안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한반도 문제를 미·중이 주도하는 데 대해 소외감을 느껴온 러시아로서는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시도하며 외교적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임.
-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러시아도 미국과 경쟁을 하는 강대국"이라며 "미·중이 합의했다고 호락호락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함.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가 실제로 미·중이 합의한 결의안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함.
- 다만, 다소 시간을 끌고서 내주 초 결의안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안보리는 러시아가 동의해주는 대로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시점은 이르면 29일(한국시간 3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검토작업이 더 지연된다면 3월 1일이나 2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외교부 "한미 '비핵화 우선' 견지...美 입장변화 없어"(2/22, 연합뉴스)

- 외교부는 22일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 북미간에 비공식 메시지 교환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한미는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는 최근 정상회담 및 통화 등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어 나가고 있다"면서,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대응을 비롯해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함.

- **北핵실험·미사일 도발후 첫 한미연습 TTX, 어떻게 진행되나(2/22,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 이후 24~26일 처음으로 진행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은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이번 TTX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위협하는 일련의 가상 상황을 상정해 진행하고, 현장에서 유사시 동원될 미국 핵우산 전력을 직접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4차례 진행된 TTX가 맞춤형 억제전략(2013년)과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인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2014년) 등의 설계에 주력했다면 이번 5차 TTX는 이런 설계를 실제 작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 **美 8군사령관 "사드 문제, 美 내부대화 종결 안됐다"(2/23, 연합뉴스)**
  -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은 23일 오후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간 진행 중인 대화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해명함.
  - 밴달 사령관의 발언은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 즉 미국 내부 논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 약정체결 연기를 요청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에 따라 미국이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고자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전격적으로 미뤘다는 분석이 나옴.
  
- **美태평양사령관 "사드 협의 합의했다고 반드시 배치하는건 아냐"(2/26,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양국이 아직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의 반대에 관계없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어서 주목되며,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이 미국의 사드 배치 추진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해리스 사령관은 다만 "내 견해로는 중국이 한·미가 동맹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라며 "특히 사드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밝혔다.

## 나. 한·중 관계

### ■ 주한中대사 "사드문제로 한중관계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어"(2/23, 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는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 위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한·중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함
- 추 대사는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한국을 믿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사드배치가 한국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냄.
-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 주장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한중 양국간 정치적 차원의 의사소통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평가함.

### ■ 中 당국자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 훼손 원치 않아"(2/24,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이 끝난 뒤 일부 한국기자들과 따로 만나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한중관계 훼손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위협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함.
- 화 대변인은 한국의 대중 비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사드 문제로 양국 관계가 민감한 상황에서 추 대사의 발언이 한국의 공분을 초래해 한중관계에 또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을 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됨.

- 화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고 일관된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어떤 국가든 스스로의 안전이익을 수호하려 할 때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 훼손을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한반도 인근 중국軍 북부전구, 백두산 일대서 첫 전술훈련"(2/25, 연합뉴스)**
  - 반관영통신인 중국 신문망(中國新聞網) 보도에 따르면 중국 육군 모 여단 소속 4개 제병(諸兵)협동대대가 최근 얼음과 눈으로 뒤덮힌 백두산 일대에서 홍·청팀으로 나뉘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술훈련을 실시함.
  -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한 한·미 간의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에 대해 중국이 연일 반발을 이어가면서 군사력 과시 시위를 계속하는 가운데 공개됨.
- **中관영언론 '추귀홍 대사 구하기'... "발언내용 틀린 것 없어"(2/26, 연합뉴스)**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6일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은 하나도 안 틀렸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추 대사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중국 정부의 입장과 중국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점"이라고 밝힘.
  - 이어 "그가 사드 문제의 엄중함과 중국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에 해당하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소통이었다"며 "외교분야에서 통용되는 발언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함.
  - 환구시보는 "사드가 최종적으로 배치된다면 중한관계는 장기간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가져올 파괴력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음.
- **한중 6자수석 서울서 회동... "향후 대응방향 심도있게 논의"(2/28,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8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후 한반도 정세를 논의함.
  - 양측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이 임박한 제재 결의 내용을 평가하는 한편, 결의 채택 이후 북핵 문제의 대응 전략과 방향을 놓고 치열한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우 대표가 이날 '상호 존중 위에서 모든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드배치 문제 등에 대한 고려를 예들러 요구한 것으로 해석됨.

- 우 대표가 한국행에 나선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여 만으로, 현 북핵 관련 정세가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는 중국 측의 상황 인식을 반영한다는 관측임.

#### 다. 한·일 관계

##### ■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4년 연속 차관급 파견(2/22, 연합뉴스)

- 일본정부는 22일 마쓰에(松江)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사카이 야스유키(酒井庸行) 내각부 정무관을 보내며, 4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음.
- 사카이 정무관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자신들의 영토라며 "냉정히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고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행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영토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외를 향해 (영유권을) 주장해 나가겠다"고 발언함.

##### ■ 정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독도도발 중단해야"(2/22, 연합뉴스)

-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이른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일본 중앙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킨 데 대해 독도에 대한 도발 중단을 촉구했음.
-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작년 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간 합의를 계기로 새로운 양국관계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일본 정부가 지방 정부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를 또다시 참석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힘.
- 이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체의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겸허히 직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 日후생상 "한반도 출신 전사자 DNA감정, 한국 제안 있으면 검토"(2/23, 연합뉴스)

- 23일 일본 국회에 따르면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일본 후생노동상은 지난 18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일본군이나 군속(군무원)으로 동원돼 전사한 한반도 출신자 신원 파악을 위한 DNA 감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진지하게 이를 받아들여 (일본) 정부 내부에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함.

- 비용 문제 등의 단서가 달렸지만, 시오자키 후생노동상의 답변은 한반도 출신 전사자 신원 파악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의 과거 입장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한국인 유족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 일본과의 교섭에 반영할지가 주목됨.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 관료를 면담하고 희망하는 모든 한국인 유족의 유전자를 채취해 이를 유골 신원 관정에 활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 **日외무상 '위안부 강제연행 확인할 자료없다' 발언 옹호(2/24,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유엔 회의에 출석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사실상 부정한 외무성 관료의 발언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은 이달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출석해 "위안부가 강제 연행 됐다는 견해가 널리 유포된 원인은 고인이 된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씨가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에서 자신이 일본군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사냥'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날조해 발표했기 때문이다"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이 서적의 내용은 당시 아사히신문에 의해 사실인 것처럼 크게 보도돼 일본·한국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며 책 내용이 이후 여러 연구자에 의해 완전히 상상의 산물임이 증명됐고 아사히신문도 2014년 8월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죄했다고 덧붙였다.

**라. 미·중 관계**

■ **美中, 한반도 인근에 초대형 레이더 운영…한반도 탐지능력되나(2/22, 연합뉴스)**

- 22일 중국 관영 관찰자망(觀察者網)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쌍야산(雙鴨山)의 한 항공우주관측제어소 부근에 있는 신형 지상 대형 전락경보 위상배열 레이더를 찍은 사진이 중국 인터넷에 등장함.
- 헤이룽장성 레이더는 방향 전환이 가능하며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궤도로 발사되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으며, 미국의 알래스카 전체도 이 레이더의 탐지범



위에 있음.

■ **中 “1시간이면 사드 파괴 가능”…연일 군사력 과시(2/22, 연합뉴스)**

- 중국 신랑군사(新浪軍事)망은 22일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를 인용, "개선시 중국 공군은 폭격기를 발진시켜 1시간이면 한국의 사드 기지와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이 한국내 배치 협의가 시작된 사드를 겨냥한 '무력 과시' 시위를 계속하고 있음.
- 같은 맥락으로 해방군보는 최근 중국의 신형 전략폭격기 홍(轟)6K 편대의 장거리 폭격 훈련을 상세 소개함.
- 중국은 이밖에도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갈등을 염두에 두고 전략 무기나 군사훈련 장면을 잇따라 공개하며 군사력을 강조하고 있음.

■ **美, 호주에 “남중국해에 함정 투입하라”…중국 주장 ‘영해’ 내(2/23, 연합뉴스)**

-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미국 해군 7함대 조지프 오코인 사령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의 섬들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은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나라의 문제라며 호주를 향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섬들의 12해리(영해) 내로 함정을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함.
- 오코인 사령관은 다른 나라들도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만큼 공격적이지는 않다고 이들 섬에 대한 중국의 간섭 규모와 속도에 놀랐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들 해상을 포함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나 오코인 사령관은 이 같은 내용이 해상법에 따른 미국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도발로 비치지 않고 미국 대 중국의 대결로 묘사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日신문 “중국,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 설정 가능성”(2/24, 연합뉴스)**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발표를 인용해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인공섬에 레이더를 건설 중이라고 소개하고서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을 시야에 넣은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중국은 인공섬 4곳에서 레이더를 가동하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 군도·베트남명 호양사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거의 전역을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신문은 전망함.
- 중국은 이들 장비를 실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상 레이더와 공중조기경보 관제기(AWACS)를 연계한 훈련을 하는 등 감시 체계의 알맹이를 채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서 미군이 함정이나 항공기를 파견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임.

■ 남중국해 중국 군사기지화…미사일·레이더 이어 전투기(2/24, 연합뉴스)

-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미사일과 레이더에 이어 전투기까지 배치하며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번 전투기 배치는 중국이 지난주 우디 섬에 HQ-9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직후 확인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에 대한 갈등이 한층 증폭되고 있음.
- 중국 국방부는 파라셀 군도에 대한 중국 공군과 해군의 방어적 배치는 자위권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증강은 지난달 말 미군 구축함이 남중국해 일대를 항행한 이후 더욱 빨라지고 있음.

■ 美태평양사령관 “中, 사드로 한·미 틈새 벌리기 가담할아”(2/24,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 방어를 위한 미사일 시스템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틈새를 벌리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함.
- 그는 "만일 중국이 진정으로 우려하고 관심이 있다면 중국은 북한문제에 개입해서 북한이 도발행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함.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청문회에서 존 매케인 위원장의 질문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힘.

■ 워싱턴서 격돌한 미·중 외교…'사드'·'평화협정' 공방 치열(2/24, 연합뉴스)

- 캐리 미 국무부 장관은 23일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과 핵문제에 의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며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함.

- 왕 부장은 회견에서 "나는 미국이 우리 제안에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놀랄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나는 이것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힘.
-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은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는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임. 두 사람 모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쟁점 부분에서 양국간에 가시적인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음.

■ **美태평양사령관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계속하겠다"(2/25,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 변화와 대책'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군이 중국의 군사기지화가 본격화한 남중국해 인공섬 근처에서 계속 군사작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 해리스 사령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패권주의 책동으로 비난했음.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남중국해 군사작전이 더 큰 위협이라고 반발함.

■ **中 원양작전 능력 갖춘 신형 미사일호위함 배치(2/25, 연합뉴스)**

- 25일 봉황망(鳳凰網)에 따르면 중국이 대양에서 미국과의 대립에 대비하기 위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갖춘 신형 미사일 호위함인 '상탄'(湘潭)함을 일선에 배치함.
- 상탄함은 최대 길이 140m, 폭 16m에 만재배수량 4천여t으로 단독, 또는 다른 해군병력과 합동으로 대함, 대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원거리 경계 및 방공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최근 미국과 남중국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거리 작전능력을 증강해 대양 해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중국 "미국 주도 림팩 해상 연합훈련에 참가"(2/26, 연합뉴스)**

-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이 오는 6~7월 미국 주도로 열리는 다자 해상 합동훈련인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에 참가함.

-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림팩 훈련 참가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중국 해군의 역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중국과 주변 관계국 해군의 교류 및 실용적 협력 강화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밝힘.
- 그간 미국에서는 중국의 군사 활동에 항의하는 의미로 중국을 림팩에 참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맷은 "중국을 올해 림팩에서 배제하면 중국이 공해(公海)에서 행사하는 일방주의에 매우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음.

#### ■ 왕이 '訪美 3박4일'...제재 협조하며 사드반대·평화협정 외교전(2/26, 연합뉴스)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3박4일' 방미 기간동안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한반도 현안 논의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보기 위한 외교전을 전개함.
- 주목할 대목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하는 대가로 민감한 외교현안을 놓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외교'를 가한 것으로, 왕 부장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
- 미국으로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내주 중 예정대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
- 왕 부장 방미의 또다른 관전포인트는 평화협정 논의를 드러내놓고 제안한 대목으로, 한국과 미국으로서는 '비핵화 우선' 기초를 유지하며 평화협정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이 같은 대화론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5자간 제재공조'를 흔들 가능성이 있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왕 부장과 라이스 보좌관의 회동 도중 깜짝 방문한 것은 미국의 대외관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전략적 관리의 필요성을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가를 시사해주고 있음.

#### ■ 미국 "시진핑, 비군사화 약속 남중국해 전역에서 지켜야"(2/27, 연합뉴스)

-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증강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백악

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앞서 약속한 '비(非)군사화'를 남중국해 전역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해당 지역 여타 국가들이 긴장을 높이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이는 지난해 9월 방미한 시 주석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국은 난사군도 해역을 군사화할 뜻이 있지 않다"고 한 발언을 끄집어낸 것임.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중국은 남중국해를 사실상 지배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음.

■ <안보리 제재> 북한 미사일발사가 미·중 협상에 '전환점'(2/27, 연합뉴스)

-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둘러싼 의견 차이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짐.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과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한 소식을 전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의견이 가까워졌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함.
- 특히 미국의 한 관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미국·중국 협상의 전환점(turning point)이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월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것이었다"고 밝힘.

■ "중국 최신 핵잠수함 또 실전 배치...미국 항모전단에 최대 위협"(2/27, 연합뉴스)

- 중국이 최신형 093B형 공격형 핵잠수함(SSN)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봉황망(鳳凰網) 등이 중국의 군사 전문사이트 '코롤료프 군사방'을 인용해 27일 보도함.
- 또한 미 해군정보기관 분석을 인용해 "093B형은 기본형인 093형에 비해 더욱 우수한 수중음파 탐지 소나와 어뢰 등의 무기체계를 갖췄고, 동력시스템도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미사일 수직발사 시스템을 갖춰 중거리 순항미사일 YJ-18(사거리 220~540km)을 최대 24발까지 쏠 수 있다고 언급함.
-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중거리 순항미사일은 '항모 킬러'로 불리는 중국의 중거리 전략 미사일 동풍(東風)-21D와 함께 미국 항모전단의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중국, 남중국해에서 새해 첫 구축함 실탄훈련…“미국에 경고”(2/28, 연합뉴스)**
  - 28일 중국군망(中國軍網) 등에 따르면 중국 해군 남해함대 소속 구축함 부대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남중국해상에서 함정 편대를 조직해 실전 대항훈련을 실시함.
  - 남해함대는 동남아 각국과의 영유권 분쟁 및 미·중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부대로, 중국이 훈련 장면을 공개한 것을 두고 미국은 물론 영유권 분쟁국들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마. 미·일 관계

- **美日, 아시아 국가에 무기전용물품 수출차단 노하우 전수(2/22,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테러 대책의 하나로 미국과 공조해 아시아 각국의 무역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음.
  -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이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수출 물품 점검이 소홀한 국가를 통해 무기가 반출될 우려가 큰 만큼 아시아 전체에서 불법 무기 수출을 적발하는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임.
  -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무기 유출 방지 시스템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잘 구축돼 있지만 동남아 등지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으며, 올해 중에 필리핀, 2018년에 태국이 각각 본격적으로 무기 전용 제품을 차단할 수 있는 수출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오바마, 아베에 러시아 방문 자제 요청했다”(2/23,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오는 5월로 계획된 러시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베 총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러일관계 소식통이 전했다.
  -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정세 및 시리아 내전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 점을 들며 아베 총리의 방러에 난색을 표했으며, 이는 일본이 대러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미일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러시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임.
  - 실제 아베 총리는 5월초 러시아 남부 소치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방러 문제에

대해 미국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시 자제를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짐.

■ **미국, 일본에 해병대용 F-35B 스텔스기 비행대대 배치(2/23, 연합뉴스)**

- 디펜스업데이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해병대는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16대의 F-35B기를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시에 있는 미 해병대 항공기지에 배치할 계획임.
- 이 부대는 애리조나주 유마의 제121 비행대대(VMFA-121) 소속으로 내년 1월에 10대를, 나머지 6대는 7월에 각각 F-35B기를 배치할 예정으로, 비행대대는 지난해 8월 실전 배치가 가능한 초기운용능력(IOC) 확보했으며, 일본 배치는 첫 해외 실전 배치가 되는 것임.
- 미 해병대는 F-35B 기종이 근접항공지원(CAS), 무장정찰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작과 운용 기간이 긴 AV-8, F/A-18, EA-6B 프라울러 등을 차례로 퇴역시켜 F-35B로 교체할 계획임.

■ **美태평양사령관 "후텐마 이전 2025년으로 2년 늦어질 것"(2/24,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의 이전 시기가 2025년으로 2년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전했다.
- 2013년 4월 미일간 합의에는 미군이 사용 중인 후텐마기지의 반환 시기를 '2022년 또는 그 이후'로 명시했으며, 일본 정부는 후텐마비행장을 같은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서둘러 이전하려 하고 있으나 오키나와현 지사 등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 통신은 "현재 추진 중인 헤노코로의 이전이 후텐마비행장 반환의 전제조건"이라며 "반환 시기가 늦어졌지만, 일각에서는 아예 후텐마비행장을 계속 운용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 **"日 아베 외교책사 방미...對북한·중국 대응 방안 논의"(2/25, 연합뉴스)**

- NHK는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북핵실험 및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군사거점화 문제 등을 놓고 미국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야치 국장의 방미는 그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릴 만큼

일본 정부의 외교 노선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그는 방미 기간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 북한, 중국 문제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야치 국장은 이번 방미기간 동안 미국측에 아베 총리가 오는 5월 독일 등 유럽 순방 길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인 지난 9일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오는 5월로 계획된 러시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음.

## 바. 미·러 관계

### ■ 마러, 27일부터 시리아 휴전 합의…반군도 조건부수용(2/23,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 정부는 2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직후에 시리아에서 이른바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 이번 합의는 휴전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에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 격인 알누스라전선,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는 제외됨.
- 미국과 러시아의 발표 직후 시리아 반정부군 대표단인 '고위협상위원회'(HNC)는 성명을 내고 "휴전 타결에 이른 국제사회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를 '조건부 수용'하겠다고 뜻을 밝혔으나, 휴전이 발효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혈 사태가 중단되고 내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함.

### ■ 마러, 시리아 휴전 뒷받침할 안보리 결의 추진(2/24, 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과 합의한 시리아 휴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채택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함.
- 유엔 본부 관계자도 타스 통신에 미-러 양국이 시리아 휴전과 관련한 두 가지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이미 마련했다면서 조만간 두 안을 합쳐 하나의 결의안으로 만든 뒤 며칠 내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독자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통합안을 만들려고 조율하고



있으나 결의안이 휴전 협정이 발효하는 27일 이전에 채택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소식통은 밝힘.

- **미국, 러시아 국채 거래 은행들에 경고…제재 효과 훼손 우려(2/25, 연합뉴스)**
  -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공화국을 강제로 병합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내린 제재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미국 정부는 일부 대형은행들에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함.
  - 러시아 국채 거래는 은행들에 경제·금융 측면에서 이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국익 차원에서는 위험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임.
  -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은행에까지 자국이 발행한 외채의 매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씨티그룹은 러시아 국채를 거래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나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는 세부 거래조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음.
  
- **“푸틴, 시리아 휴전합의에 의기양양…‘러시아의 승리’ 선전”(2/26,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27일부터 시리아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승리'로 자축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함.
  - WP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최근 휴전 합의에 대한 연설에서 5분여 동안 '러시아와 미국', '러시아와 미국 전문가' 등의 표현을 써가며 아홉 차례나 양국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으며, '러시아연방과 우리의 미국 파트너들' 이라고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을 언급한 방식이 사뭇 달라졌다고 지적함.
  - WP는 그러나 러시아가 그동안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 시리아 내 테러세력을 응징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미국이 지원해온 반군 세력을 공습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내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양국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봄.

## 사. 중·일 관계

- **“중일 ‘북한 문제 논의’ 고위급 협의 이달 중 개최 조율”(2/22, 연합뉴스)**
  -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지아의 보도에 따르면 쿵췌안유(孔鉉佑) 중국 외무 차관보

가 일본을 방문해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심의관과 고위급 협의를 이달 중 개최하기 위해 조율 중임.

- 양측은 지난달 4차 핵실험과 이달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담이 성사되면 최근 북한 문제 대응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푸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으나 중국 측이 응하지 않았음.

#### ■ 中-日의원, 북핵·미사일 비난…중국측 대북 대응엔 신중론(2/23,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단으로 구성된 '중일의원회의'가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로, 강력히 비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함.
- 중국측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 등으로 사태가 확산해서는 안 된다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 회의에서 일본측은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베트남 명 호양사 군도)에 지대공미사일을 배치한 데 대해서 강하게 우려를 표시했고, 중일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전함.

#### ■ 일본, 센카쿠 경비담당 해상보안청 인력·장비 증강(2/24, 연합뉴스)

- 일본이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에 대응해 일대를 전담하는 해상보안청 본부의 장비와 인력을 증강했음.
- 24일 일본해상보안청과 센카쿠열도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해상보안청 제11관구해상보안본부(이하 11관구)에 따르면 11관구 소속 인력 정원이 전국 각 관구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됐음.
-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 주변을 감시할 경비 선박도 증강함.

#### ■ 日방위상 “北, 대남 포격 도발 가능성 부정 못해”(2/24,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4일 북한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중대성명을 통해 선제적 작전수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의 국지적

도발행동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함.

- 그는 또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에 조성하는 인공섬에 레이더 시설을 건설하는 데 대해 "중국의 행동은 (자국 영토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및 기정사실화를 한단계 더 진전시키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 전투기를 배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함.

■ **일본-필리핀, 방위장비협정 곧 체결...남중국해서 중국 견제(2/26, 연합뉴스)**

- 26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주변국들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필리핀과 방위 장비·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임.
- 이 협정은 방위장비·물품을 공급하거나 관련 기술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3국에 장비·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정부는 앞서 미국, 호주 등과 방위 장비·기술 이전에 관한 협력을 체결했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체결하는 것은 필리핀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 필리핀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훈련용 항공기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양측은 협정 체결 후 이에 근거해 협의할 것으로 보임.

아.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자.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미국 서방이 최악의 인권 불모지”(2/23, 연합뉴스)
  - 북한은 2월 23일 미국과 서방이 최악의 인권 불모지라고 주장했다.
  -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이날 발표한 고발장에서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인권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더욱더 우심하게(심하게) 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협회는 각종 총기 난사, 테러 사건과 난민 사태 등을 미국과 서방의 책임으로 돌리며 “미국과 서방은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떠들지 말아야 하며 제 집안 문제나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 조선인권연구협회는 1992년 설립된 단체로 주로 북한인권문제와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해 왔음.
  - 북한의 이런 주장은 최근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가 추진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北, 북한인권법 겨냥 “집안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반발(2/23, 연합뉴스)
  - 북한은 23일 우리 국회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북한인권법을 겨냥해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이념은 인민대중 제일주의이며, 정치방식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우리민족끼리는 또 “인간 생지옥인 남조선에서는 전체 주민 세대의 47%에 달하는 850여만세대가 셋방이나 쪽방, 비닐집 등 집 아닌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완전 실업자는 450여만명, 반실업자는 1천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괴뢰패당이 어리석은 북한 인권 소동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 있는 데는 저들의 동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 그를 통해 이제 4월에 있게 될 총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 여야는 기존에 합의된 북한인권법을 나머지 무쟁점 법안과 묶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

■ ACAPS “북, 인도주의 위기국”(2/24, 자유아시아방송)

- 전 세계 국가들의 인도주의 상황과 필요 여부를 평가하는 벨기에 비정부기구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24일 ‘국제 위기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구의 약 7%가 인도주의 위기에 의해 영향 받고 있다며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분류했음.
- 북한 주민 180만명이 외부의 식량 원조에 의존해야 한다는 설명임.
- ACAPS는 유엔이 지난 1월 낸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극심한 가뭄 이후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영양과 건강 상태도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 ACAPS는 특히 북한여성과 아동의 영양과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깨끗한 물도 부족해 가뭄 피해지역 어린이들 가운데 설사병을 앓는 어린이가 가뭄 전보다 72%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이 가운데 ACAPS는 약 6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백신 등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응급 의료 장비 등은 태부족 하며, 보건 시설 등이 식수 시설이 열악해,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위험마저 커지고 있다는 설명임.
-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의 비정부기구 ‘조선 그리그도인 벅들’이 외국인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결핵 병원과 요양소를 방문한 가운데, 이중 한국계 미국인 결핵균 전문가 한 명은 북한에서 유엔이나 외부에서 들어가는 약이 장마당으로 빠져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밖에도 ACAPS는 북한은 지난해 곡물생산량이 감소해, 2만5천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음.

■ 北 리수용 외무상,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차 출국(2/27, 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오는 2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했음.
-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31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27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짧게 보도했음.

- 리 외무상은 전체회의에서 지난 15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됨.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기소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북측에 통보하라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요청했음.
  - 리 외무상은 지난해에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가 탈북자들의 허위 증언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일방적 주장을 한 바 있음.
- 북, 당 대회 자금 마련하려 국경통제 강화?(2/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북-중 국경연선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월 25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세관검열 말고도 내부 지역에서 국경지역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들의 통제가 갑자기 강화되었다”며 “당국은 외국에서 유입될 수 있는 전염성 비루스(바이러스)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은 점이 많다”고 언급했음.
  - 소식통은 “청진에서 국경연선인 남양 세관까지 자동차로 하루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단속초소가 11개에서 13개로 늘었고 검열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합법적인 통행증을 갖고 있어도 도로에서 이들을 보내야 할 만큼 검열이 심하다”고 지적했음.
  - 이와 관련 2월 25일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무역국 차량인데도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졌다”며 “특히 중국에서 물품을 싣고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석부터 차 밑바닥과 부속품들까지 세세히 들여다 본다”고 살벌해진 검열과정을 설명했다.
  - “일각에선 이렇게 복잡해진 검열과정이 당대회준비를 위해 사법기관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한 이른바 ‘70일전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전제한 소식통은 “하지만 외화벌이가 시급한 형편에서 중앙에서 왜 사법기관들의 이런 횡포를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답답함을 드러냈음.

## 2. 북한인권

### ■ 영국 의회서 북한여성 인권유린 증언(2/22,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서 세우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국 의회에서 북한 정권의 여성 인권유린에 대한 증언이 이뤄졌음.
-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초당적의원그룹’(APPG)은 2월 22일 런던 의회에서 ‘북한 여성 인권유린 해결’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를 열었음.
- 이날 콘퍼런스는 마르주카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정권 수뇌부가 반인도적 범죄로 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유엔에 권고한 가운데 열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 APPG 공동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보수당)은 “북한에서 여성 인권유린은 지속적인 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브루스 의원은 “더 이상 눈감아줄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 이 끔찍한 폭력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음.
- 그는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커다란 발걸음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콘퍼런스에는 탈북 여성인 최민경 씨가 악명 높은 전거리 교화소 여성 수감동에서 겪은 지옥 같은 생활을 증언했음.
- 아울러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브로커들에 의해 중국 남성들에게 팔려가는 인신매매 증언도 이어졌음.
- 또 김정은 등 북한 정권 수뇌부를 유엔 ICC 법정에서 세울 수 있는 방법론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음.

### ■ 통일부 “북한인권법, 민족 장래 위해 반드시 필요”(2/23, 연합뉴스)

- 통일부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북한인권법에 대해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 발전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측이 북한인권법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이념은 인민대중 제일주의이며, 정치방식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라며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남측의 북한인권법을 비난했음.

-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며 “인권법이 통과하면 시행령 작업에 들어가는데 약 6개월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에 남겨둔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보험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유동자산 부분도 정부합동대책반에서 검토가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그는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수행자 명단에서 잇따라 빠진 것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보면 (김 제1위원장이) 군부대 훈련을 참관할 때 황병서가 안 보이고 다른 군 장성이 현지에서 맞이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런 패턴의 일환인지, (황병서가) 다른 업무를 보러 갔는지, 신변 이상인지는 좀 더 정보를 취합해 봐야 한다. 아직 얘기할 만한 확정적 정보가 없다”고 말했음.

#### ■ 엠네스티 “北, 모든 분야에서 주민 인권 침해”(2/25, 데일리NK)

-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이 24일 발표한 전 세계 160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음.
- 엠네스티는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 당국이 정보를 극도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하지만, (북한 당국은) 사실상 모든 주민들에게 국제전화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은 전파 방해 등을 통해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외부와 연락하기 위해 밀반입된 중국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간첩죄 등의 죄목으로 체포와 구금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 체제 아래서 국경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으로 탈출하려



다 체포된 주민들이 늘어났다”면서 “이와 같이 탈북자나 외부 정보에 접근을 시도 혐의가 있는 경우 체계적으로 감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이 밖에도 보고서는 “해외에 파견된 5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당국에 착취 당하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또 북한 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배급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존권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 北인권법, 외통위 의결…29일 본회의 통과만 남아(2/26, 데일리NK)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음.
- 오는 2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05년 첫 발의된 지 11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될 전망이다.
- 외통위는 그동안 여야 간에 큰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제2조 2항)’ 조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토록 했음.
- 또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도 설립하도록 했음.
- 재단 이사는 12명으로 구성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함.
- 이밖에 통일부에 10명 이내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절반씩 동수로 추천하는 내용도 담았음.
- 나경원 위원장은 “늦게 출발했지만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일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며 “이것을 계기로 북한주민들의 자유가 더 증진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 ■ 다루스만 보고관 “러시아, 북한 노동자 강제송환 말아야”(2/27, 미국의소리)

-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러시아가 지난 2월 2일 북한과 체결한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최근 체결된 협정을 근거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를 체포해 강제송환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 특히 새 협정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정 보다 적용범위가 넓은데다, 북한 국적자를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착취를 당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인간 노예화에 해당될 수 있고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협정이 체결돼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고의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정이 체결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더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다.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러시아에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북한의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지난 2일 서명한 이번 협정은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ICC 관한 로마규약 비준해야”(2/27, 미국의소리)
-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이 중대한 우려사안이라고,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밝혔다.
  - 자이드 최고대표는 2월 29일부터 3월24일까지 열리는 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북한에서 자의적 처형, 고문과 불법적인 구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임.
  - 또 정보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 결사와 이동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자이드 대표는 밝혔다.

-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자이드 대표는 북한 정부에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관한 로마규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음.
- 자이드 대표는 또 북한 정부가 반인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등 적절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배상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음.
- 아울러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북한 당국에 요구했음.
- 특히 북한 정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됐거나 강제실종된 피해자 가족들과 해당 국가에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존자와 그 후손들이 즉각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음.

### 3. 탈북자

#### ■ 에드 로이스, 왕이에 탈북자 복송 중단 촉구(2/25, 자유아시아방송)

-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중국 외교수장의 면전에서 중국의 탈북자 복송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음.
- 로이스 위원장은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전날 만나 북한 등 동북아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당시 면담에서 왕 외교부장에게 북한의 핵무기가 동북아시아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들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북제재법에 서명했다는 것임.
-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 역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며 중국 역시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이 심각한 인도주의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음.
- 중국이 서명한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를 준수해 난민 송환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임.

####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 7. 대북지원

##### ■ 프랑스 NGO, 북한서 염소 목장 사업 지원(2/25, 미국의소리)

- 프랑스의 민간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사업 담당관은 올해 황해남도 4개 지역에서 식량 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베노리엘 담당관은 2월 24일 황해남도 협동농장에서 진행한 식량 지원사업이 지난해 11월 종료됐으며, 이 지역 내 또 다른 협동농장 4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사업은 신원군과 해주시, 벽성군, 삼천군 내 염소농장에서 염소우유로 만든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더 많은 염소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염소 사육방법을 교육하는 것임.
- 또 두유 제조기계를 제공하고 두유생산법과 염소우유로 요구르트를 만드는 기술도 전수할 계획임.
- 이 사업으로 3만1천 5백 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베노리엘 담당관은 덧붙였다.
- 베노리엘 담당관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 120만 유로, 미화 132만 달러를 유럽연합에 요청했다며,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는 별도로 프리미어 어전스는 황해남도 해주시 배급소에서 빵을 만들어 어린이 1만5천 명을 포함한 취약계층 1만8천여 명에게 1주일에 두 번 빵을 제공하고 있음.
- 프리미어 어전스는 또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사료생산 증대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축산업 관계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황해남도 농업대학 축산학과 교수와 학생, 시범농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료 증산 방안을 가르치고 있음.

■ 미 NGO, 북한에 옥외 수도시설 설치…최근 설비 보내(2/26, 미국의소리)

-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최근 옥외 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보냈음.
- 이 단체는 24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의 장비를 이날 선적했다며, 5월에 방북해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또 다른 미국의 구호단체 웰스프링과 협력해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시설들에 옥외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수도시설 공사는 우선 우물을 판 뒤 물탱크와 태양열 집열판,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이 단체는 지금까지 북한 내 약 13개 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며, 올해도 적어도 3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 단체는 지난 12월 소식지에서 “우물과 수도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물을 얻기 위해 매일 요양소에서 0.5km나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 반나절이나 걸려 물을 길어와야 했지만 이제는 깨끗한 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돼 현지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 우물 한 곳을 파는 데는 미화 3천~5천 달러, 태양열이나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약 2만5천 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 8. 북한동향

- [北 인권연구협회 고발장(2.23)]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행위를 우심하게 감행하고 있다’며 ‘최악의 인권 불모지, 최대의 인권 유린국인 미국과 서방은 제 집안문제나 바로 잡는데 집중하라’고 주장(2.23, 중앙통신)
- \* 美 총기사건들 등을 거론 ‘범죄의 왕국, 인권유린의 난무장’이라며 ‘미국은 그 누구를 훈시하기에 앞서 제 주제부터 살펴보고 그것을 바로잡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주장(2.23, 중앙통신·민주조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